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3.1(화) ~ 2022.3.7(월)

제공일시 2022 03 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3.1(화) ~ 2022.3.7(월)

제공일시 2022 03 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탄소감축만으로 안된다...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복원력 회복 '절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6차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복원력 회복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지금, 탄소감축 노력만으로는 부족함
- 개발과 발전을 포기할 수 없는 각국 정부가 나아갈 길은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라고 제안

(한겨레, 2022. 3. 1) 최우리, 김정수, 김민재 기자
<http://www.han.co.kr/461/society/environment/20220308.html>

2. 유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만든다

- UN이 2024년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첫 국제협약을 만들기로 합의
-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파리기후 협약 이후 가장 중요한 다자간 협약'이라는 평가가 나옴
- 회원국들은 연내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를 구성해 협상에 돌입할 예정
- 통상적인 글로벌 협약에는 5~10년이 걸리지만,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논의기간이 3년으로 단축됨. 롯데케미칼, LG화학, SK지오센트릭, SK케미칼 등 석유화학업계의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업에 대한 진행속도가 빨라질 전망

(서울경제, 2022. 3. 3) 박윤아 기자
<http://www.seoul.co.kr/461/news/2022/03/03/2022030304>

3. 러우 사태 놀란 EU, 신재생 시간표 당긴다...韓 태양광·풍력 기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한 유럽이 재생에너지 시간표를 앞당길 예정
- 독일이 전력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비슷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이 알려짐
- 유럽에 진출한 한국 태양광과 풍력 기업의 먹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머니투데이, 2022. 3. 3) 최민경 기자
<http://www.moneytoday.co.kr/461/news/2022/03/03/2022030303>

4. '거세지는 ESG 열풍' 미국 SEC, 기후 공시 의무화 표결 임박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상장 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방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
- 최대 쟁점인 스코프3(Scope 3) 정보까지 공개된다면 에너지, 자동차, 유틸리티, 자본재 등 탄소집약 업종은 감축을 요구하는 강력한 주주제안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
- 탄소집약 산업체들은 전체 공급망을 포함한 배출량 측정 방법이 정립되지 않아 공시 의무화 시 다양한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

(조선일보, 2022. 3. 6) 이인아 기자
http://biz.chosun.com/2022/03/06/2022030604?cat=usa&size=realtime&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utm_campaign=naver

1. 상장사, 물적분할 때 주주보호방안 보고서 명시해야

- 금융위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이번 개정으로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원칙'을 신설하고, 주주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기술하도록 세부원칙을 신설
- **소유구조변경시 소액 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해 보고서에 기술**해야 하며, **주주보호 정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향후계획을 설명**해야 함
- 추가로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과 관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내부거래와 경영진,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통제도 강화할 예정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역시 주요 내용을 문서화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이데일리, 2022. 3. 6) 김소연 기자
<http://www.iedaily.com/article/newspaper/03/0005/00051000-20220307>

2. ESG 채권 발행 '주춤', ESG 프리미엄 기대도 '시들'

- **공모 회사채 시장이 금리 인상 등 이슈로 흔들린 탓**에 ESG 채권 시장이 시들해지고 ESG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도 한풀 꺾임
- 지난해까지만 해도 ESG 채권을 발행하면 수요예측에서 흥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는데, **올해 들어 SK 에코플랜트와 울산 GPS는 ESG 채권(녹색채권)까지 잇달아 미매각**을 냈기 때문
- 지난해에는 이랜드월드, 대한항공 단 두 기업만 미매각이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달라짐
- 올해 발행된 ESG채권은 11조81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8% 감소한 수치를 기록함
- **ESG 채권이라는 강점도 시장 약화의 파고를 넘어서기는 역부족**이었다는 설명

(더벨, 2022. 3. 4) 이지혜 기자
<http://www.thebell.co.kr/article/newspaper/03/0004/00041000-20220304>

3. "주주소통 결과 이사회에 보고"...SK, 4년만에 지배구조현장 '전면 개정'

- 재계 거버넌스 혁신을 주도중인 **SK가 4년 만에 지배구조현장을 전면 개정**
- 개정된 지배구조현장은 전체 조항 수가 개정 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고, **이사회 역할과 책임, 이사회 내 위원회, 주주총회,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항목 등이 상세히 구술**됨
-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신뢰 구축 방안이 강조**됐으며, 소통의 범위를 ESG 경영 전반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주주소통위원의 활동 결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 의무 규정 역시 추가됨
- 주주에 대한 공정한 정보 제공 및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공개 규정도 추가됨

(머니투데이, 2022. 3. 6) 김성은 기자
<http://www.moneytoday.com/article/newspaper/03/0006/00061000-20220307>

1. “국내 금융기관 최초” 신한금융, 금융자산 탄소배출량 측정 시스템 개발

-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금융자산의 탄소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개발
- 이는 탄소회계금융협회(PCA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의 탄소배출량을 금융자산 기준으로 정교하게 산출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그룹의 중장기 탄소중립 금융 전략인 ‘Zero Carbon Drive’의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

(Korea IT Times, 2022. 3. 3) 김민지 기자
<http://www.kor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52>

2. 기아, EV9 포함 매년 전기차 2종 출시...2027년 14종 라인업

- 기아가 내년 대형 SUV 기반 전기차인 ‘EV9’을 시작으로 매년 2종의 전기를 출시해, 2027년까지 총 14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
- 특히 적극적인 전동화 전환으로 친환경차 판매 확대를 추진해 눈길을 끄
- 2022년 17%인 친환경차 비중을 2030년에는 52%까지 확대해 친환경차 중심의 판매구조를 갖추겠다는 방침

(데일리안, 2022. 3. 3) 박영국 기자
<http://www.dail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54>

3. ‘RE100’ 속도...인천공항, 10년 앞당긴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5개월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아시아 공항 가운데 최초이자, 영국 히드로공항과 게트윅공항에 이어 세계 공항 중 세 번째로 글로벌 RE100*에 가입함
- 2030년까지 인천공항 전력사용량의 60%, 2040년까지 100%를 태양광·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해, RE100 권고기준인 2050년보다 10년 앞서 RE100을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

(인천일보, 2022. 3. 2) 김청우 기자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37>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4. "회사 가치 올려라"..주주행동주의 나서는 운용사들

-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들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주행동주의’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 VIP자산운용은 한라의 지주회사인 한라홀딩스의 지분 5% 이상을 새롭게 취득하며 자사주 매입 후 소각과 자회사 지분 100% 취득 등을 요구
- 안다자산운용은 SK케미칼에 배당 증대와 함께 소수주주의 권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촉구
- 자산운용사의 주주행동주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지배구조’의 개선과 주주 친화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음

(머니투데이, 2022. 3. 3) 구경민 기자
<http://news.mt.co.kr/articleView.html?idxno=202204>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3.1(화) ~ 2022.3.7(월)

제공일시 2022 03 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탄소세가 기업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옥스퍼드대 연구

- 로버트 에클스(Robert Eccles) 옥스퍼드대 비즈니스스쿨 교수 연구팀은 **탄소세가 효과적인 배출 감축과 저탄소 경제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격이 증가할수록 기업 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
-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된 탄소세(Carbon Tax)는 비(非)시장재인 ‘탄소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행정 장치로서, 가격신호를 활용해 환경오염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조정하는 규제정책. 직접적 금지 규제와는 다르게, 탄소세는 환경오염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시장 메커니즘으로 끌고 들어와 인위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여 시장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시장친화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음
- 정부의 효과적인 솔루션이 탄소세라면, 시장에서 효과성을 인정받는 것은 탄소배출권. 할당량*과 크레딧**을 시장에서 사고 파는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에서 거래 가격이 높아야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높다는 시각이 지배적. 골드만삭스 최근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50% 가까이 줄려면 톤당 100달러(12만원)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예측
- 이처럼, **탄소배출의 효과적 감축을 위해선 탄소세나 배출거래 금액이 높게 형성되는 게 합당하다는 게 학계와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 그럼 탄소세나 배출거래 금액이 높아질수록 기업 수익(재정적 영향)에는 긍정적일까, 아님 부정적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로버트 에클스 교수 연구팀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방법론을 적용해 예측
- 예측을 위해, 연구팀은 ESG 평가기관인 ‘Trucost’가 제공하는 기업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사용하여, ‘Compustat’(글로벌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지난 3년간(2017~2019년)의 미국 기업 평균 기업 수익에 50, 100, 150달러의 탄소세를 각각 적용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 분석 결과, 소비자 전가가 없다는 전제 아래 **톤당 100달러의 탄소세가 책정될 경우 미국 기업은 수익 측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남. 톤당 100달러 탄소세를 적용할 경우, 분석기간동안 흑자를 낸 기업 중 1275개사(59.6%)는 당기순이익 손실이 10%로 떨어지고, 562개 흑자기업(26.3%)의 손실률은 50%에 이를 것으로 분석
- 한편, **톤당 50달러, 150달러의 탄소세 부과를 분석한 결과, 탄소세가 높아질수록 기업 수익에 악영향이 더 커진다는 추정이 보다 명확**해짐. 스코프 3***까지 포함해 50달러를 부과할 경우 미국 기업의 약 7.7%가, 150달러 부과할 경우 20.7% 기업이 수익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100달러 부과 시, 14.5% 기업이 수익을 잃는 것으로 추정
- 산업별로 보았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섹터는 유틸리티로 58.5% 기업이 100달러 탄소세 부과시 수익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원자재(54.5%), 식품 및 담배(46.2%), 식품 및 필수재 소매(45%), 자동차 및 부품(42.9%) 순으로 수익 타격을 입는 것으로 추정. 반면, **영향을 적게 받는 산업군은 은행, 보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으로 조사**. 특히, 분석기간 중 291개의 흑자 은행 중 단 한곳만이 10%의 수익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남

(Responsible Investor, 2022. 3. 1) Robert Eccles 외
<https://www.responsibleinvestor.com/news/carbon-tax-likely-to-reduce-growth>

(Responsible Investor, 2021. 10. 4) Khalid Azizuddin
<https://www.responsibleinvestor.com/news/carbon-tax-likely-to-reduce-growth-again-when-vegoff>

(Goldmansachs, 2020. 6. 16)
<https://www.goldmansachs.com/insights/research/carbon-tax-likely-to-reduce-growth-again-when-vegoff>

- 연구팀은 금융섹터의 직접적인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탄소세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 비록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금융섹터의 직접적인 탄소 배출량은 낮지만, **자금 조달 및 투자 기업에 대한 간접적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면 배출 영향도는 상당**하다고 지적

* 할당량은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총량만큼 발전 설비나 생산 설비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에 지급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의미

** 크레딧은 외부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에 대해 기준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는 증서로서 해당 프로젝트에 지급되는 배출권을 의미

*** 스코프3(Scope3)는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외부 탄소 배출량을 의미